

한국원폭피해자 활동 역사 일지



- 1910~1945 일제, 침략전쟁과 불법적 식민지배로 우리 주권을 빼앗고 일본으로 80만 명의 조선인 강제 동원
- 1945. 8. 미국,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 투하, 이로 인해 피폭된 조선인은 약 7만~10만 명, 사망자 약 5만 명으로 추정됨. 이 중 상당수는 강제 동원된 징용공
- 1945. 8.~ 살아남은 피폭자 4만 3천여 명이 해방된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한국 정부의 무관심과 원폭 후유증으로 인한 가난과 사회적 냉대로 고통받음
- 1967. 7. 10. 피해자들, 1965년 한일협정 체결을 계기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한국원폭피해자 원호협회 창립(2월 11일 창립총회, 7월 10일 보건사회부 인가), 1971년에 한국원폭피해자 협회로 개칭
- 1967. 11. 4. 원폭 피해자 20여 명, 일본 대사관 앞에서 '내 몸을 변상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시위
- 1968. 10. 미쓰비시 조선소로 강제 동원되었다가 피폭당한 피해자 손귀달, 일본 밀입국 후 한국인 피폭자도 치료하라고 요구했으나 일본은 거부
- 1968. 12. 피해자 임복순(서울)과 엄분연(부산), 일본 주고쿠 신문 기자(히라오카 다카시)의 도움으로 히로시마 병원에서 원폭 치료를 받은 후, 한국 거주 피폭자로는 최초로 피폭자 건강수첩 교부를 신청했으나 일본은 거부
- 1969. 4. 1.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 설치
- 1970. 4. 10. 히로시마 거주 한국 피폭자 윤병도의 제안과 재일 한인들의 모금으로 히로시마 평화공원 내에 한국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세우고자 했으나 일본이 가로막아 평화공원 밖에서 제막식 거행
- 1970~1978 피해자 손진두(부산), 치료를 위해 일본에 밀입국, 8년 동안의 끈질긴 소송 끝에 건강수첩 교부 받아 한국 피폭자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길 열어
- 1971. 7. 1. 한국원폭피해자협회원 10여 명, 사토 일본 총리 방한에 맞춰 의료시설, 생활 대책, 자녀들의 교육 대책을 세워 달라는 서한을 전달하려 일본 대사관에 갔다가 강제 연행

1971. 8. 6. 한국원폭피해자협회원 10여 명, 미국 대사관 앞에서 “미국 정부도 한국 피폭자들에게 보상하라”고 외침
1973. 12. 합천원폭피해자진료소 건립
1975. 3. 6. 강제 동원되어 피폭된 피해자 이남수, “내가 죽으면 나의 관을 일본 대사관에 맡기고 일본에서 보상이 나올 때까지 장사를 지내지 말라”는 유언 남기고 생을 마감
1988. 2. 8.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신영수 회장과 피해자 4명, 야나이 신이치 일본 대사를 만나 2만 5천여 명의 한국 피폭자 치료비로 23억 달러를 지급하라는 「요망서」 전달
1990. 3. 22. 한국원폭피해자협회원 300명, 국회 앞에서 일본의 사죄 배상을 요구하는 결의대회 개최
1990. 6. 11. 피해자 이맹희, 일본 대사관 앞에서 원폭 피해에 대한 배상 요구하며 음독자살 시도. 이 일에 자극받은 김학순은 1991.8.14. 자신이 종군위안부였음을 밝혀 ‘위안부’ 문제가 세상에 알려짐
1994. 7. 23. 한국 원폭 피해자 113명,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의 배상을 촉구하는 집회 개최
1994. 12. 일본, 일본 거주자로 지원 대상자를 한정한 일본피폭자원호법 제정, 한국 거주 피폭자를 원호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차별
1996. 10.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건립
1997. 8. 6. 합천원폭피해자복지관 내 원폭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각 설치
2002. 1. 15.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 총회, 합천원폭자료관 건립 추진 계획 결정
2002. 3. 22. 원폭 2세 김형률은 아버지 김봉대와 함께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폭 2세 환우 문제를 세상에 알림. 이후 한국 원폭2세 환우회 결성, 원폭 2세를 포함한 지원 특별법 제정 운동 벌임

- 2002~2003 피해자 곽귀훈, 일명 '곽귀훈 재판'을 시작해 승소(2002)하여 2003년부터 한국 거주 피폭자도 일본 원호법을 적용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길 열어
2003. 8. 5. 원폭 피해자 및 원폭 2세 환우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2004. 1. 16.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 총회, 원폭평화공원 추진 계획 결정
2004. 8. 국가인권위원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 의뢰하여 원폭 피해자 1세대 1,400여 명, 2세대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직접조사 및 우편조사로 실태조사, 국가기관이 실태 조사에 나선 것은 처음
2005. 2. 14. 국가인권위원회, 「원폭 피해 2세의 기초 현황과 건강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발표. 그러나 조사 기간은 6개월, 예산은 3,000만 원에 불과해 실태조사의 한계 명확
2005. 8. 4. '원폭피해자 진상규명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가칭)' 발의(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 외 여야 의원 23명)
2005. 10. 19. 한국원폭피해자협회원들, 피폭자들에 대한 지원 외면해 온 정부의 처사에 분노해 국가 인권위원회를 점거하고 ▲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 제정 ▲ 피해자 실태조사와 지원 대책 마련 ▲ 한일협정 재협상 등을 요구하며 13일간 농성
2011. 9. 20. 한국원폭피해자협회원들,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사죄와 배상, 한일협정 파기와 한일청구권협정 재협상 촉구
2012. 1. 12.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2012. 3. 23 ~ 24. 합천 평화의 집 등 제1회 합천 비핵·평화대회 개최
2012. 5. 24. 대법원, 일제의 식민지배와 강제 동원을 불법으로 규정(2018. 10. 30. 대법원 강제 동원에 대한 판결도 같은 취지)
2012. 10. 11.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 2013. 8. 12. 원폭 피해자들, 한국 정부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제기, 일본의 사죄 배상을 위해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
- 2014. 10. 10.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 2015. 4. 27. 평통사와 참여연대, 미 국무부를 방문해 한국 피폭자 존재 인정과 조사, 사죄와 배상에 나설 것을 촉구, 미 국무부는 한국 피폭자 존재 부인
- 2015. 5. 1. 피해자 심진태와 김봉대(김형률 부친), 유엔에서 한국 원폭 피해자 문제 처음으로 제기, 피해자 심진태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미국과 일본 정부에 한국 원폭 피해자의 존재 인정과 조사, 사죄와 배상을, 반인도적인 핵무기 폐기와 불법화를 위한 유엔의 역할 촉구
- 2015. 5. 피해자 심진태와 김봉대(김형률 부친), 최봉태 변호사와 평통사에 김형률 생전의 목표 이자 유지가 된 미국 법정에서의 소송 가능성 검토 의뢰
- 2015~2016 최봉태 변호사와 평통사, 미국 소송 가능성 검토 조사 및 연구
- 2015. 9. 8.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등,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 앞 집회 개최하고 “미국과 일본은 한국 원폭 피해자에게 사죄하라”고 외침
- 2015. 9. 23.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 개정
- 2016. 5. 26. 일본을 방문한 미국 오바마 대통령, 미국의 원폭 투하로 인한 피해자 가운데 “수천의 한국인”을 언급,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한국 피폭자의 존재 인정
- 2016. 5. 26. 피해자 심진태·심명자(합천), 성득찬(경남), 차무남(대구), 고일국(서울), 한국원폭2세 환우회 한준순 등은 오바마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 히로시마에 가서 한국 원폭 피해자 존재 인정과 조사, 사죄와 배상 촉구
- 2016. 5. 29. 피폭 71년 만에 국회에서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 제정, 그러나 특별법에는 2세 등 피해자 후손 지원 내용 빠짐
- 2017. 5. 30.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 시행령 공포

- 2017. 7. 10.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 2017. 8. 6. 합천원폭자료관 건립
- 2018. 10. 27. 원폭2세 환우회와 원폭 2세회를 통합하여 한국원폭피해자후손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3세대 원폭 피해자임을 인정받기 위한 조직을 갖추
- 2018. 11. 16.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원폭평화공원 조성사업분과위원회 설치
- 2018. 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자폭탄 피해자 현황 및 건강 생활 실태조사 결과 발표
- 2019. 2. 21.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 평화의집과 평통사 등, 문재인 대통령 합천 방문 및 2·3세 지원 가능하도록 특별법 개정 등 요구
- 2019. 4. 10.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 2019. 4. 25.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제1차 세계(비핵)평화공원조성추진위원회 개최
- 2019. 4. 25. 한국원폭피해자협회·평통사, 한국 원폭 피해자 구술조사 업무협약 체결
- 2019. 5. 28.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비핵·평화를 위한 한·일 국제포럼'에 참가한 일본 원수폭피해자 단체협의회(피단협)와 원수폭금지일본협의회(원수협)에 미국의 원폭 투하 책임을 묻는 민간법정 제안
- 2019. 6. 28. 한국원폭피해자협회 250여 명, 트럼프 대통령 방한 즈음해 미국 대사관 부근에서 미국의 사죄·배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가두행진 벌임
- 2019. 7. 16. 경기도 원폭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 2019. 9. 6.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미국의 원폭 투하 책임을 묻는 민간법정 추진을 결정하고 관련 진행을 평통사에 의뢰
- 2019. 9. 9.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이규열 회장,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합천 방문 요청 및 한국 피폭자 대표단 면담 요청 서한 발송

- 2019. 10. 10.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 2019. 11. 25. 한국원폭피해자협회·평통사,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일에 맞춰 나가사키 방문, '핵 없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 피폭자에 대한 위로와 격려 요청' 서한 전달
- 2019. 12. 한국원폭피해자협회·평통사, 공동 발기로 한국에서 핵무기금지조약 가입 촉구 국제서명 운동 전개, 팩스 크리스티 코리아·사회진보연대 등 30개 단체가 공동서명운동 단체로 참가
- 2019. 12. 13. 인천시 원폭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 2020. 1. 29.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 2020. 3. 보건복지부, '한국원폭피해자 추모사업 기본계획' 용역 시행
- 2020. 5. 보건복지부, '피폭 1·2·3세대 코호트 구축 및 유전체 분석 연구' 용역 시행, 2024년까지 한국 원폭 피해자 1~3세대까지 심층 추적 조사하기로 함
- 2020. 12. 22. 서울시 원폭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 2021. 3. 18. 울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 2021. 6. 16.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
- 2021. 7. 12.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
- 2021. 9. 27. 한국원폭피해자협회·평통사·노드돌, 3자 업무협약서 체결로 원폭 민간법정 준비 관련 영문 자료 조사 및 미국 내 토론회 등의 사업에 상호 협력하기로 함
- 2021. 11. 4. 한국 정부, 경남 합천군에 '한국원폭피해자 추모시설' 조성을 추진하기로 결정, 이는 비핵 평화공원 조성에 대한 피해자들의 요구가 20년 만에 받아들여진 것임
- 2022. 1. 6. 경기도 원폭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 경기 지역 원폭피해자 후손 2·3세까지 지원 확대